

생활고에 창업·투자 실패까지… 빛에 무너지는 중장년 노후

m-커버스토리

고령층 소득 기반 취약

개인파산 신청 83% 50대 이상 60대 비중 36.5%로 가장 높아
채무 원인 1위는 '생활비 부족'
재파산자 10% 넘어 재기 어려워
전문가 "무리한 창업·투자 경계"

중장년층의 고금리 빚 증가로 노후 파산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채무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중장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 경기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상황 여력이 떨어지면서 고령층 취약자가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지난해 중장년층 파산 비중 83%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를 통해 접수된 개인파산·면책 건수는 총 1192건으로, 50대 이상 신청자가 전체 83.1%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6.5%로 가장 높았으며, 50대가 25.1%, 70대 이상이 21.5%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신청자의 84.6%가 무직 상태로, 특히 60대 이상 무직 비율은 88.2%로 집계됐다. 일자리가 있다라도 상당수가 일용직이나 단기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 경기부진, 고금리 장기화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차주들이 대다수라는 설명이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이 7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진 계기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한 경우가 89.8%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Chat GPT가 생성한 노후 파산 관련 이미지.

지했다. 이 가운데 질병과 입원 등이 영향을 미친 사례는 30.2%로 지난 2023년 대비 5.9%포인트(p) 증가했다.

파산 신청자 가운데 한 차례 파산을 겪은 뒤 다시 파산 절차를 밟는 '재파산자' 비율은 10.6%를 넘어섰다. 이들 중 상당수는 60대 이상으로 고령층의 경제적 재기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 프랜차이즈·무리한 투자 등도 원인

현장에서는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든 중장년층이 생계를 위해 프랜차이즈 창업에 나섰다 파산에 내몰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퇴직금 등 노후 자금을 활용해 가게를 열었다가 기대만큼 수익을 내지 못해 투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중장년층이 많다는 것이다.

충분한 금융 지식 없이 무리하게 투자에 나서는 점도 중장년층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식산업센터와 생활형 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자금을 투입했다가 손실을 입으면서 채무 부담이 커지는 경우다.

이 외에도 주식 리딩방이나 코인 사기,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딥페이크를 활용한 신종 사기 등에 노출돼 자금을 잃는 사례도 상당수라는 설명이다.

실제 회생·파산 관련 분야 변호사는 "최근 법원에 접수되는 노후 파산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활용해 충분한 준비 없이 창업하거나 금융 지식 없이 무리하게 투자하려다가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 노후 파산 막으려면 '무리한 투자' 경계

전문가들은 노후 파산에 내몰리지 않으려면 은퇴 이후 무리한 창업이나 투자 결정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개인회생·파산 분야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특히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프랜차이즈를 차려 자영업에 시작하려는 경우가 많다"며 "완전히 다른 업종인데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많은 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 공공기관의 금융·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가계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금융복지 종합상담과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채무

조정 상담 및 접수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교육과 재무관리 교육을 비롯해 기초생활보장·긴급 복지 등 복지서비스 연계,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등도 제공한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센터는 서울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의 내실화와 함께 금융취약 어르신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 금융복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피해 어르신의 신속 회복 지원 및 재정 자립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금융안전망 강화와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업한 중장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 지원금 제도도 마련돼 있다. 재도전 특별자금을 비롯해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이 대표적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metro

산불이 삼킨 온실가스 감축분 지난해 순배출 310만톤 증가

총배출량은 전년보다 0.9% 감소
산림 흡수량 22.8% 급감 영향
2030 NDC까지 1.5억톤 추가 감축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수송과 산업 부문의 감축에 힘입어 소폭 감소했으나, 대형 산불 여파로 산림 흡수원이 크게 훼손되면서 최종 '순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협정에 따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1억 5000만톤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추가로 줄여야 한다.

◆ 산불 한 번에 날아간 감축 노력… 총배출 줄어도 '순배출'은 증가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발표한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에 따르면, 지난해 총배출량은 6억 8571만톤으로 전년(6억 9181만톤) 대비 610만톤(0.9%) 감소했다.

하지만 온실가스를 흡수·저장하는 산림 및 토지 분야의 흡수량이 3103만톤에 그치며 전년 대비 22.8% 급감했다. 지난해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바이오매스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만 830만톤이 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로 인해 총배출량에서 흡수량을 뺀 '순배출량'은 6억 5470만톤을 기록, 전년 대비 310만톤(0.5%) 오히려 늘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산업과 수송, 농축수산 및 폐기물 부문은 배출량이 줄어든 반면, 전력과 건물, 냉매 부문은 증가세를 보였다.

수송 부문은 배출량 9459만톤으로 전년 대비 2.9% 줄어들며 감축 폭을 키웠다. 경유차 누적 등록 대수가 2024년 910만 1000대에서 2025년 860만 4000대로 줄어 들고, 전기·수소차(72만 2,000대→94만 4,000대) 및 하이브리드차 보급이 늘면서 경유 사용량이 6.1% 급감한 영향이다. 산업 부문 역시 2억 4293만톤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철강(조강 생산량 -2.2%), 석유화학(기초유분 6종 -2.3%), 시멘트(출하량 -12.8%) 등 대배출 업종의 생산 감소가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력 부문은 2억 2043만톤으로 전년 대비 0.2% (40만톤)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8.5% 크게 늘었음에도, 원전 예방정비·정지일수 증가(2096.1일→2239.6일)로 전력 공급 안정성을 위해 석탄발전을 2.2% 늘린 탓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Fighting!

**생명보험이
100세 시대를 뛰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금융,
생명보험으로 준비하세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종신까지 든든한 생명보험이 삶의 여유를 드립니다.
혜택도 보장도 평생 든든한 생명보험이 함께 합니다.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